

# “자위권 주장 위해 ‘도청앞 집단발포 전 시민 총기 무장’ 조작”

## 신군부, 5·18 왜곡·조작 5대 사례

- ① 과격시위로 무질서·혼란 → 경찰과 대화하며 평화시위
- ② 공수부대 우발적 진압 → 투입하자마자 무차별 폭행
- ③ 시민무장에 자위권 발동 → 자위권 발동 전 집단발포
- ④ 북한군 광주 잠입 → 군·정보기관 서류에도 없는 내용
- ⑤ 광주는 무법천지 → 항쟁 열흘 간 강력사건 기록 2건 뿐

전남지방경찰청은 11일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전남경찰 역할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계엄군 등에 의해 조작되고 왜곡된 5가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전문 수사관을 동원, 고도의 수사 기법을 활용했으며 각종 증거와 자료 검증 등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요 사안에 대해 국가기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 본청도 이번 조사에 적극 협력하는 등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로 그동안 5·18 정신을 훼손해온 북한군 개입설, 폭동 진압설 등 각종 유언비어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전남경찰의 설명이다. 조사를 통해 바로잡은 5대 왜곡사례를 짚어봤다.

◇“5·18 직전 광주 학생들 과격 시위”=5·18 당시 신군부는 학생시위로 무질서와 혼란이 극에 달해 군의 개입이 없어서는 안 될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 시내의 상황은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시대적 요구에 따른 민주화, 학원자율화 등을 주장하는 학생 시위만 진행됐다. 특히 경찰과 학생들은 일정한 시위 규칙을 지키면서 상시 대화 채널이 가동됐다.

◇“공수부대 과격 진압은 우발적”=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측 인사들은 학생과 시민의 선제공격에 흥분한 공수부대가 우발적으로 과격진압에 나섰다 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찰조사에서 신군부는 치안당국인 경찰과 협의도 없이 공수부대를 광주 시내 직전에 투입해 1~2시간 만에 300여 명이 넘는 시민을 검거하고, 무차별적 폭행을 자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당시 계엄확대 조치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광주 시민에 대한 공포감 조성으로 억누르려한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 총기탈취 무장, 군 자위권 발동 불가피”=경찰은 시민들이 총기를 탈취해 무장하고 발표함에 따라 자위권

발동이 불가피했다는 신군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경찰은 “시민의 손에 경찰무기가 들어간 시점은 5월 20일 밤으로, 그나마도 실탄이 없는 칼빈 17정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민들의 최초 무기실탄 피탈은 5월 21일 오후 1시 30분경으로,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이뤄진 5월 21일 오후 1시 전까지는 시민군의 총기발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계엄군 집단발포가 5월 20일 야간 광주역 부근에서 이미 이뤄졌고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군의 자위권 발동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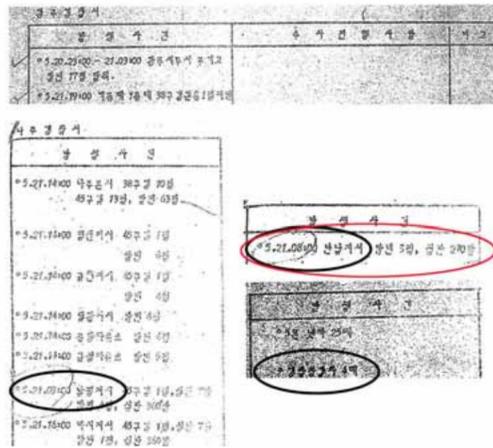
◇“북한군 수백명 광주 잠입해 시위 주도”=경찰은 북한군 수백 명이 광주에 잠입해 시위를 주도하고 사라졌다는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당시 정보·보안 형사와 현장 경찰관의 증언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경찰은 “5·18 당시에는 북한군 개입설 자체가 언급된 적이 없으며, 당시 작성된 군과 정보기관 서류에도 없는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인사에 의해 주장되고 있으며, 전두환 회고록에도 이를 암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광주에는 정보·보안 형사 130여명이 활동했으며, 시내 주요지점 23개소에 정보센터가 총총하게 운영됐는데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수백명의 북한군이 활동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계엄군 철수 후 광주 시내 무법천지”=경찰은 계엄군 철수 이후 광주를 무장시민군에 의한 살인과 약탈 범죄가 판치는 무법천지인 것처럼 묘사한 국방부와 국가안전기획부 기록,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조작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광주에서 1980년 5월 18~27일까지 열흘간 경찰 강력사건 기록은 서부서 관내 2건뿐이었고 당시 강력사건 재판 기록 역시 3건뿐이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총기 피탈 조작의 증거

왼쪽은 조작된 문서로 판단되는 '전남도경 상황일지'. 도청 앞 집단 발포(1980년 5월 21일 낮 12시 59분) 전인 같은날 오전 8시 나주 반남지서에서 시민군이 총기를 탈취했다고 기록돼 있지만 수기 기록 문서인 오른쪽 '전남경찰국,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사항'과 당시 근무자 진술에 따르면 반남지서에서 총기 탈취 사건은 없었다.

## 5·18 당시 경찰관 등 137명 면담 ... 군·검찰·경찰 내부 기록 조사

### 전남경찰, TF팀 5개월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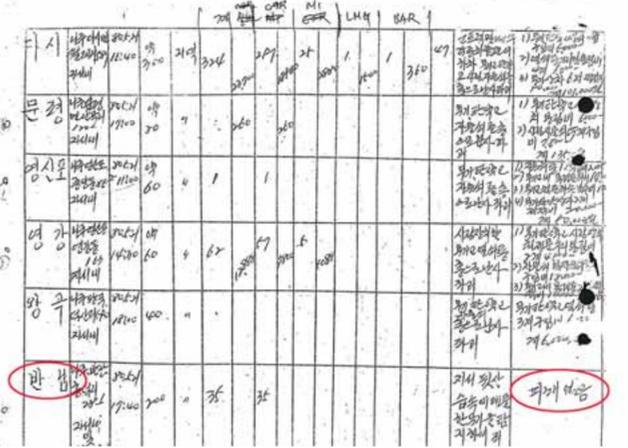
### 21일 헬기 기총소사 증언도 나와

전남지방경찰청은 11일 5·18 직전 광주의 치안 상황과 계엄군의 과격 진압, 시위대의 무기 탈취 과정, 북한군 개입설 등에 대한 경찰 기록과 근무자 증언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남경찰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경정급 1명, 경감 3명 등 6명으로 구성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경찰 사료 수집 및 활동조사 TF팀을 꾸리고 지난 4월 27일부터 5개월간 5·18 당시 경찰 활동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TF팀은 5·18 당시 현장 경찰관과 관련자 137명을 면담 조사했고 국가기록원과 광주시, 경찰 내부 기록 등을 조사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경찰청 치안본부가 5·18 직후 작성한 뒤 지난 30년간 비공개로 설정하고, 국가기록원에 파묻혀 있던 경찰 감찰자료인 '전남사태 관계기록'을 최초로 인수, 검토·분석한 점은 큰 성과로 꼽힌다.

경찰은 당시 현장 경찰관들의 증언과 전남사태 관계 기록 분석 등을 통해 기존 계엄군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았으며, 광주 시민에게 덧씌워졌던 억울한 오해를 풀어주고 5월의 역사 자료를 보완·보강하는 성과도 냈다.



경찰은 또 당시 현장경찰관 137명에 대한 체류 과정에서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인근을 순회하던 헬기에서 총을 쏘는 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일부 증언을 확보하기도 했다. 의혹만 제기되고 있는 '헬기 기총소사'에 대한 당시 경찰의 증언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다만 경찰이 이번 조사의 범위를 5·18의 경찰책임론을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을 반박하고, 당시 경찰의 활동 기록 및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함에 따라 암매장지와 헬기 기총소사 관련 증언을 구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은 앞으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물론 검찰

등에서 추가 조사 및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힘을 보낼 방침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직접 진두지휘한 강성북 전남지방경찰청장은 “경찰 자체적으로 5·18에 대한 진상조사나 기록이 없는 탓에 ‘전두환 회고록’ 등 왜곡된 진술에도 그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며 “더 늦기 전에 생존 경찰관과 증언과 자료를 수집해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진실 규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또 “이번에 수집한 증언과 자료를 영구 보존하고 관련 자료와 참여자들의 증언을 계속 확보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도심 평화시위 공수부대 살인진압으로 시민항쟁 초래했다”

### 5·18 직전 활동보고서 내용

11일 전남경찰이 밝힌 5·18 직전 활동보고서를 살펴보면 5·18 직전인 1980년 5월 16일은 경찰의 보호 아래 광주 도심에서 평화적인 거리시위가 진행됐다. 다음날에는 대부분 진압경찰이 휴식을 갖고 여유를 하는 등 평상시와 다름없는 분위기였다. 광주·전남 시도지방 경찰청의 전신인 옛 전남경찰국 기록에 담긴 1980년 5월 당시 광주 치안 상황은 정에 특전부대를 투입해야 할 만큼 혼란스러운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대학생 주도로 100~500명씩 참가하던 시위에 고등학생과 시민 등 군중이 합세할 때도 있었지만, '서울의 봄'으로 불리는 이 시기 전국 다른 도시에서도 집회는 비슷한 규모로 잇따라 열렸다. 당시 경찰 기동대원은 “시위가 끝나면 대학생과 경찰이 서로 '고생했다'며 음료수를 나눠 먹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경비계에서 근무했던 경찰관은 “16일까지만 해도 햇불 행진 등 평화시위를 마친 학생들이 '경찰들 고생하셨다'며 축식

에서 모은 돈 10만원을 위로금으로 주고 가기도 했다”고 그때 상황을 설명했다. 이 같은 광주 상황은 5월 17일 자정을 전후해 7공수여단을 시작으로 계엄군이 배치되면서 달라졌다는 게 당시 근무 경찰들의 증언이다. 전남경찰국에 몸담았던 경찰관들은 당시 계엄군 작전에 대해 ‘미리 정해진 시위대를 끝까지 추적해 구타 후 연행’, ‘착검한 M-16소총을 가로로 매고 1m가량 목봉으로 무차별 가격’, ‘사람을 실신시켜서 끌고 가’ 등 강경 일변도의 모습으로 기억했다.

또 다른 경찰관계자는 “경찰이 충분히 학생시위를 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어떤 이유인지 공수부대가 투입됐다. 이들이 시민을 자극해 불행한 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증언은 '12·12 및 5·18 사건' 검찰 수사 결과와 행정기관 상황일지에 담긴 내용과도 일치한다. 11일 5·18 당시 경찰활동을 담은 첫 공식보고서를 낸 전남지방경찰청은 계엄군이 폭력을 자행하고 과격한 진압을 펼치면서 대학가 시위가 시민항쟁으로 치달았다고 분석했다. /\*김용희기자 kimyh@

광주일보 65 광주일보 연속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불받아요!

빈병기보증금 상담전화 1522-0082  
www.kora.or.kr

##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병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병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병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면적 150% 확대 색상 변경

[인상 전] 40원 → [인상 후] 100원

| 대상용량                    | 규격                 | 2016. 12. 31. 까지 출고된 용량(색상) 변경에 적용 | 2017. 1. 1. 부터 출고된 용량(색상) 변경에 적용 | 비고                 |
|-------------------------|--------------------|------------------------------------|----------------------------------|--------------------|
| 재활용병 사용량 제17조 2항에 따른 제품 | 190ml미만            | 20원/개                              | 70원/개                            | 소형 마-라미 등          |
|                         | 190ml 이상 400ml미만   | 40원/개                              | 100원/개                           |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
|                         | 400ml 이상 1,000ml미만 | 50원/개                              | 130원/개                           | 맥주(대형) 등           |
|                         | 1,000ml 이상         |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 350원/개                           | 대형 청음 등            |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